

## 언론취재체계 및 기자단에 관한 문제점

송정민

전남대 신방과 교수

### I. 머리말

최근 들어 우리 나라 언론은 안팎으로 여러가지 변모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정보전달속도의 단축과 양의 증대를 위한 신문과 방송들의 개별적인 노력들은 괄목할 만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보전달체계의 개선 움직임들이 언론의 기업적 이익을 위해서였건, 아니면, 정보시대의 사회적 요청에 의한 것이었건, 그 결과에 대한 언론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보다 많은 정보의 신속한 전달이 설사 언론의 개별적 노림수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권력에 기댄 담합 형식의 과거언론 온존의 틀은 용납하지 않으리라는 일반인들의 생각때문이다.

그러나, 모처럼 일고 있는 언론의 이러한 자기개선 노력들이 자칫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소리도 없지 않다. 언론이 정보를 충실하게 전달하자면 기계적인 것(수단)과 질적인 면(내용)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언론은 정보전달체계의 물리적 원에만 집착하여, 정보수집과 구성의 과정 즉, 뉴스의 취재 및 보도 체계의 개선에 대해서는 거의 도외시하고 있다. 수단의 형식은 급격히 현대화하고 있으나, 그것을 통해 흐르는 정보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변화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돌이켜 보건대, 우리 언론의 역사는 정보 전달수단을 바꾸는 일에만 전념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진정으로 시대 또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찾아 소용에 맞게 전해주고자 한 흔적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몇 십년 동안 흔들림없이 유지되어온 취재관행과 뉴스 구성 형식들은 아직도 깨어질 수 없는 신화처럼 엄존하고 있다. 특히, 「출입처 중심의 취재」와 같은 고식적인 뉴스취재방식으로는 시대에 뒤떨어진 정보 전달이 불가피한 것은 물론, 기자들의 부패를 근절시킬 수 없다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으나, 이렇다 할 언론의 움직임은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오랫동안 우리 언론의 관행이자, 정보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온 출입처 중심의 취재체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또한, 시대적 변화에 필요한 정보를 사회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뉴스수집 과정에 어떠한 실천적 변화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고자 한다.

### II. 취재관행과 문제점

#### 1. 출입처 중심 취재방식의 연원과 개념

대부분의 우리 신문과 방송들이 택하고 있는 출입처 중심의 취재체계가 과연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개념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 이 방식이 취하는 취재대상과 한계가 무엇인지, 언제부터 우리의 언론이 이를 활용하게 되었는지가 분명치 않다. 따라서 같은

종류의 매체끼리도 적용범위가 일정하지 않고, 유형이 전혀 다른 매체들 사이에서는 그러한 문제들과 관련하여 갈등을 내비치기까지 한다.

그러나, 우리 언론의 현실을 감안할 때, 출입처중심의 취재방식이란, 부서 또는 기구별 뉴스 수집을 원칙으로 한다. 뉴스 취재대상과 범위가 사회적 문제나 환경 중심이 아니라, 관청이나 정당조직과 같은 기구 위주로 정해진다.

다음으로 출입처 중심 취재체계의 특징은 기자단의 구성에 있다. 출입처별 기자단은 각 언론사에서 파견된 기자들로 이루어지며, 뉴스에 관한 한 소속 기관장의 기자회견 등을 주관하거나, 출입처가 내놓는 보도자료의 처리에 대한 논의를 주로 한다.

그리고, 언론사관계자와 출입 부서관계자 사이의 직접 · 간접적인 연결 기능도 이 방식의 중요한 특성의 하나이다. 취재와는 별도의 사회적 관계를 매개함으로써 자주 비판의 과녁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뉴스대상에 관한 상호오해를 풀어주는 긍정적 기능도 한다.

출입처 중심의 취재체계의 연원은 어떻게 보면 짧지 않은 것도 같다. 일제 침략기에도 총독부전담 출입기자들이 있었고, 미 군정기에는 군정청출입기자 및 기자단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방식이 언론의 준제도와 같은 모습으로 되기 시작한 것은 이승만 정권의 중반 이후부터가 아닐까 한다. 당시의 상황으로 미루어보면 이승만 정권은 카리스마적 지배체제의 유지를 위해 언론에 대한 강 · 온 양면 통제작전을 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고, 언론은 그들대로 권력을 떠받쳐 주는 정치 · 사회적 체계를 파고 드는 데서 대 국민적 힘을 발휘하고자 했다. 다시 말하면 보수언론이 민족문제와 관련한 이념적 방향을 극복하고, 국민들의 일상 속에 자리잡기 위해서는 정치 · 경제 · 사회 문제 등과 관련한 부서들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그들에 대한 影響力을 높이는것이 필수적이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兩者의 必要性에 의해 출입처 중심의 취재양식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다. 한편, 학자들에 따라서는 출입처 중심의 취재체계는 日本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일본의 軍國主義時代부터 있어온 官廳 中心의 기자클럽제를 우리 언론이 無批判的으로 받아들인 결과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 언론의 폐단으로 거론되고있는 형태의 출입처 중심의 취재 관행은 70년대초를 전후하여 구성되고, 80년대에 들어서 완성을 본 것으로 판단된다. 모든 취재 활동은 철저히출입처가 정하는 범위로 한정하고, 公式的으로配布되는 정보전달의 대가로 物質的 補償을 출입처로부터 보장받는 이른바 官邊言論은 곧, 軍部獨裁權力의 所産으로 보아야 한다. 언론과 군부독재권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물론 보다 세심한 고찰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글에서 문제삼고 있는 우리 언론의 취재방식이 권력과 언론의 밀착에 의해 관행으로 굳어지게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권력은 언론을 지배하기 위한 統制 次元에서 출입처별 취재 체계를 용인 또는 장려해 왔고, 언론 또한 체제내에 온존하는 방편으로 이 구조를 적극적으로 견지해 왔다는 것이다.

2. 現行 取材體系의 長點출입처 중심의 취재방식이란 쉽게 요약하면,立法 · 司法 · 行政의 각 기구 또는 부처 별로 언론사가 일정한 수의 기자를 내보내 뉴스를 蒐集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테면,保健社會部の 경우, 파견된 기자가 이 부처의 각 부서에서 진행되는 업무 일체를 중심으로 취재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사부 管掌業務가 20개 분야이면, 기자들은

자신의 專門的知識과는 상관없이 그 모든 분야를 뉴스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현행취재체계는 우리언론의 실정에 비추어 長點도 있으나, 결코 바람직한 방식은 아니라는 지적이 오히려 많다.

현행 취재방식이 지닌 장점이라면 다음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1) 다양한 뉴스원 및 취재대상에 대한 접근의용역뉴스는 사실에 대한 기자의 취재 · 확인 · 분석 · 종합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기자가 뉴스를 취재할 때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어떻게 하면 뉴스원이나 취재 대상에 손쉽게 접근하느냐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뉴스거리를 구상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로 확인 또는 증명되지 못하면 뉴스로서의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위 뉴스화 과정이 과거처럼 쉽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는 옛날부터 언론에 대해 상당한 권위와 지위를 부여해 왔다. 그만큼 언론인이 어떤 문제에 접근할 때 장애물이 별로 없었다. 취재에 응하는 것도 정치인은 물론 관료나 시민들 누구이건 의무처럼 생각했고 가능한 한 협조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언론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크게 달라졌다. 사람들은 언론의 권위나 지위를 그 사회적 역할 또는 개인적 이익과의 관계 속에서 평가한다. 그래서 기자가 가면 누구나 마냥 취재에 응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 저것 헤아려보고 싶으면 거부하고 만다. 즉, 사회에서의 개인적 영역이 확대되면서, 공익과 관련된 일조차도 그 성패의 여부가 개인에 매달리게 된 것이다. 때문에 기자들에게는 취재원에 대한 접근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게다가 한 기자에게 부과되는 취재대상의 종류나 폭이 점차 커지고 있다. 사회가 변화하는 만큼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기자들은 또 그러한 내용들을 버려둘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상의 난점을 극복하고, 언론이 신뢰성 있는 정보를 수용자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는 사회 문제에 대한 공적 수임기관인 정부부처 또는 정치조직 별로 취재를 행하는 것이 원만한 방법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 부처야말로 해당 분야의 각종 업무가 관통하게 되는 곳이고, 공신력을 갖고 사회 문제에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기자로서 여러 가지 소관 문제들을 비교적 쉽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것이다.

## (2) 선의의 경쟁성 제고와 의견교환

언론인은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노력에 의해 완성되어 간다. 사회의 변화나 움직임을 보는 눈도 기자가 본래 지니고 있는 감각이나 천재성 보다는, 끈질긴 추적과 집요한 탐색의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기자들이 한가롭게 소일하거나 뉴스의 대상을 보고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사회를 포착하는 능력을 갖출 수가 없으며, 바람직한 언론인으로 자라나지도 못한다. 따라서 기자들에게는 늘 움직일 수 있는 유형 · 무형의 자극, 이를테면 타 기자들과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경쟁의 채찍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출입처 중심 취재 체계는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 서로 경쟁하는 기자들이 출입처를 중심으로 모여들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긴장이 쉽 없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경쟁의 긴장이 각각의 기자들을 사회 속으로 나아가게 함으로써, 그들이 부단히 일하는 언론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출입처가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출입처는 기자들의 의견교환의장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상호 경쟁의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사회의 복잡한 양상을 읽어내는 안목과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나누어보는 데는 출입처가 적절하다. 많은 기자들이 모여들면 의견들이 자연스럽게 제기되게 마련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바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타진해 볼 수 있는 것이다.

### (3) 관료들의 정보은폐에 대한 집단적 대응

정보사회가 시사하는 바대로 우리 주변에서는 무수한 정보가 생산 유통된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내용은 극히 일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정작 모두가 알아야 할 정보는 일상적 유통과정에서 찾아 보기 힘들다. 사람들이 정보의 홍수시대에 살면서, 무정보 상황을 겪어야 하는 것이다.

필요한 정보가 유통되지 못하는 책임은 언론에도 있지만, 관료들의 계획적인 은폐 기도 또한 크다. 이를테면, 전문화 및 관료화된 우리의 거대한 행정체계의 경우, 그 담당자들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 곧 행정 기능의 수행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들은 중요한 대 사회적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함으로써, 행정을 국민들의 생활 수준과 일치시켜 나가려고 하기 보다는, 행정 그 자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느냐에만 역점을 두어, 정보의 흐름을 의도적으로 막거나 강제한다. 그리고, 이 같은 수법이 고도로 조직화 또는 전문화 하여 기자 개개인으로서서는 저항이 어렵다. 출입처 중심 취재체계는 곧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집단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 3. 현행 취재체계의 단점

앞에서 살펴본 대로 출입처 중심의 취재체계가 기자들의 뉴스 수집에 도움이 되는 일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같은 취재방식의 도입이 처음부터 언론의 개체 보존이나 현상 유지에만 목적을 둔 것이 아닌 바에, 나름대로 지니는 장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언론의 취재와 관련한 실제 모습은 온통 부정적이다. 취재의 편의를 도모하고 다양한 정보를 캐내기 위해 도입됐던 출입처 중심취재체계가 그 본래의 목적과는 거리가 먼 형태로 변해있다는 것이다. 뉴스 취재내용의 충실성에 기여하기보다는 기자들의 비리행각의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 (1) 왜곡된 뉴스 또는 단편적인 정보의 양산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출입처 중심의 취재체계는 보통 그 취재 범위가 부처의 관장 영역에 준하도록 돼 있다. 즉, 기자들이 출입하는 부서가 「경제기획원」이면, 기획원 소관 업무가 취재 대상의 범위로 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자는 자신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출입 처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을 모두 취재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다행히 경제 전반에 관한 상당한 지식과 분석 능력을 가진 기자라면 별 문제가 없겠으나, 그렇지 못할 때는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기자 스스로도 잘 모르는 기사를 작성하거나 자기 수준에서 이해되는 내용만을 뉴스화 함으로써, 경제 정황을 왜곡되게 전달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예는 국회 중심의 취재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국회에 출입하는 기자들의 평상시취재는 정당 활동에 관한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따라서 국회 관련 기사는 문자 그대로 정치기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정기국회가 열리면 뉴스의 초점은 새해 예산심으로 집중된다. 수십 조원에 달하는 예산 재원이 국민의 세금인 것은 물론, 그것을 어떻게 유효 적절하게 나누어 쓰느냐에 따라 나라의 전체적인 살림살이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중요한 예산안은 정치적 식견만으로는 파악할 수가 없다. 고도의 경제지식과 계수 해독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분석이 가능하다. 예컨대, 출입처 중심의 취재에서 얻어진 상식 수준이 아닌, 전문적인 식별 능력에 의해서 비로소 예산안의 긍정적·부정적인 점들을 추출해 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 상황에만 매달려온 국회 출입기자들의 새해 예산안 심의관련 기사는 정부·여당의 주장이 아니면, 야당의 부분적 지적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작성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뉴스들은 결국 전문 관료들이 권력의 뜻에 따라 예산안에 숨겨놓은 비리적 요소들을 집어내지 못하고 만다. 국회는 어떻게 보면 정치 경제·외교·사회·문화의 각 분야를 총괄하는 곳인데도, 출입처 중심의 취재체제로 하여 정치관련 기자들이 전담하게 됨으로써, 그만큼 뉴스가 피상적이거나 왜곡되는 것이다.

### (2) 사회적인 문제 파악을 위한 관련 출입처간의 차별성의 부족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사건이나 이슈들은 항상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일례로 노사갈등의 경우, 경제적인 요소로부터 사회·정치·문화적인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부분들까지 작용하는 것을 보아도 그렇다. 따라서 노·사 갈등을 비롯한 사회적인 문제들은 항상 관련 부서가 연계하여 문제를 파악해야만, 문제의 원인을 알아낼 수 있고, 사회적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언론의 현실은, 출입처 위주로 취재 보도를 전담시키는 것이 상례다. 예컨대, 갈등이 폭발했다면 그것은 당장 경찰의 소관 업무이니까 사회부 경찰청 출입기자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이런 경우 복잡한 요인으로 야기된 노사갈등은 결국, 폭력시위대 진압의 차원으로 뉴스화되고 만다. 출입처별 취재 구조가 문제관련 부서별 차별성을 단절시키고, 그것은 나아가서 문제의 진의를 호도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 (3) 황금알을 낳는다는 출입처 기자단

출입처 중심 취재체제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기자단의 구성이다. 청와대에는 「청와대 출입기자단」이 있고, 국회에는 「국회 출입기자단」 및 각 「정당 출입기자단」이 있다. 또한 경제 및 행정관련 부처로부터 청 단위의 부서에 이르기까지 기자들이 집단으로 드나드는 곳이면 어디나 공식·비공식적으로 기자단이 결성되어 있다.

출입처별 기자단 구성의 목적은 당초 출입기자들간의 상호친목을 도모하고 취재의 편의를 확보하는데 두었다. 따라서 기자의 신분이 확실하면 누구나 그 구성원이 될 수 있고, 별다른 제한규정도 있을 수 없는 것이 기자단의 성격일 것이었다.

그러나, 기자단과 출입처 사이에 교통비 또는 촌지 형태의 상당한 액수의 돈이 오고 가면서, 기자단은 별종의 유사이익집단 성격으로 바뀌었다. 그러는 가운데 기자단은 구성원 자격을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하고, 비밀 보장을 위한 장치로 회원이 준수해야 할 규칙 아닌 내규까지 만들었다. 기자단은 그 이후 취재 활동에 장애가 되는 회원들은 온갖 구실을 붙여 쫓아내거나 준회원으로 격하시키는 횡포를 자행했다. 특히 신규로 기자단에 가입하고자 하는 기자들은 일정한 기간 「기자단의 복지(?)」에 헌신적이었다는 평가가 내려져야 비로소 준회원 또는 정회원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기자단의 이 같은 성격과 분위기는 70년대 말과 80년대 초에 이르러서는 더욱 저질화로 치달았다. 사회질서를 어지럽힐 가능성이 매우 큰 문제조차도 기자단이 담합하여 보도를 앓거나 역보도의 조건으로 출입처 또는 관련 업체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아 나누어 가졌다는 풍문들이 꼬리를 물었다. 그리하여 자유로운 취재 보장확보라는 기자단 본연의 목적은 소멸되고, 돈벌이 위주의 기자단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그리고 이 같은 기자단의 가려진 비리는 「한보사건」이 터짐으로써 사실로 입증되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언론의 입에 바른 대국민 사죄가 끝나자마자 드러난 보사부 촌지 비리사건에 이르러서는, 출입처 기자단은 더 이상 언론단체가 아닌,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씻을 수 없는 세간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 (4) 「엠바고」와 「오프 더 레코드」의 빈발과 독자 우롱

출입처에 처음 나가는 기자가 기자단의 정회원으로써의 자격(?)을 유지하려면, 잘 따라야 할 사항 가운데 중요한 것이 「엠바고(embargo)」 및 「오프 더 레코드(off the record)」이다. 흔히 알다시피 전자는 뉴스보도 시간을 출입처 또는 뉴스원이 원하는 시간에 맞추어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후자는 뉴스보도를 앓는다는 조건으로 뉴스원이 기자만 알게끔 낚시 전해주는 형식을 뜻한다. 이 두 가지 방식은 어디까지나 뉴스원의 필요성에 의 한 것이지만 기자단 구성원들이 어겨서는 안될 불문률(?)로 되어있는 것이다. 뉴스를 취재하자면 뉴스원과 본의 아닌 약속을 하지 않으면 안될 때가 물론 있다. 뉴스원이 언론에 정보를 제공했다고 하여 그가 속한 조직 또는 권력으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당하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엔, 심각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또한 뉴스 이전에 개인의 사적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도 그렇다.

그러나, 기자단과 출입처 사이에 흔히 통용되는 엠바고나 오프 더 레코드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 조금이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사안인데도, 그것이 대통령과 관련된 것이거나, 정부가 노리는 모종의 특별한 목적과 관련되어 있으면, 뉴스천은 일정기간 보도정지를 시키든가, 아니면 기자들에게 귀뜸해주는 것으로 입을 막는 것이다. 즉, 출입처와 기자단 간에 통상 사용되는 엠바고나 오프 더 레코드는 명칭만 다르지 보도관제와 형식이다. 뉴스 보도가 사실상 저지되거나, 아니면 보도가 된다 해도 시간상으로나 내용으로 보아 뉴스성을 잃기 때문이다.

기자단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엠바고며 오프 더 레코드를 철저히 지키려는 숨은 의도는 다른 곳에 있다. 기자단과 출입처 사이의 내밀한 관계 유지, 즉 촌지 수수의 수단으로 이것들이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 언론인들 스스로의 지적이다. 출입처인 당국의 입장을 그 같은 방법을 통해 살려주고, 대가로 물적 보상을 기자단이 얻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저런 이유들로 해서, 출입처와의 사이에 한번 결정된 엠바고나 오프 더 레코드를 깨는 기자를 상대로 한 기자단의 대응은 자못 신경질적이기까지 하다. 예컨대, 지난 199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던 「한소 정상회담」에 관한 소식을 보도하는데 있어, 「한겨레신문」과 「부산일보」 기자가 엠바고를 했다는 이유로 기자단이 그들에게 기자회견실 사용을 금지시킨 사건 등이 그것이다. 특히, 앞서 두 신문의 기사내용이 외국신문에는 이미 적나라하게 보도된 것이었는데도, 정부와 기자단 사이에 결정된 엠바고를 지키지 않았다고 두 기자를 기자만이 밀어낼 것은 웃지 못할 치졸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아무튼 기자단의 엠바고나 오프 더 레코드 준수는 뉴스원의 뉴스유통 통제를 받아들이는 것이며, 보다 양질의 뉴스취재 수단으로서가 아닌, 물적비리와 관련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독자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되고 있다.

#### (5) 「데스크」 오염원으로서의 출입처

출입처 취재체계는 뉴스원과 데스크(즉, 언론사 내에서 뉴스 생산 과정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각부 부장 등)를 자연스럽게 연결시킴으로써 보도의 충실화를 기할 수 있다. 뉴스원에 대한 이해와 관련 기사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파악이 항상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데스크와의 이러한 관계를 늘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출입처에 해당기자를 파견했으면 그만이지, 데스크까지 연결되면 2 중 3 중으로 사람을 내보내는 꼴이 아니냐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데스크와 뉴스원과의 사적관계가 가까울수록 기사가 오히려 왜곡되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기자들의 지적도 있다. 다시 말하면, 불충실한 취재보도는 그 같은 사적 관계의 긴밀도와 높은 상관성을 유지해온 것이 경험적으로 입증되고 있다는 것이다.

데스크와 출입처와의 사적 긴밀성이 지니는 더욱 큰 문제는 언론비리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데스크가 직접 간접적인 촌지 형태의 물적 거래를 벗어나기 힘들며, 최근에 드러났던 갖가지 언론비리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입증되었다. 출입처는 곧, 뉴스가 흐르는 과정의 핵심에 있는 데스크마저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다

### III. 취재 체계의 전환을 위한 제언

어떠한 취재 체계가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언론인 스스로 생각할 문제이다. 누구라도 취재 현장에 서있는 기자들만큼 그 한계성을 직접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가 이 글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단편적인 조언에 불과하다.

원칙적인 이야기이지만, 기자의 취재의 시작과 결과는 뉴스에 있다. 뉴스 이외의 어떠한 목적도 취재에 개재해서는 안된다. 이 같은 원칙론과 관련하여 우선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뉴스중심 취재체계」로의 전환이다.

현행 취재체계는 「부처」나 「부서」가 있는 곳에 출입처가 있고, 출입처 있는 곳에 기자가 있는 형식이다. 다시 말하면 뉴스가 있는 곳에 기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자가 출입처를 따라간 뒤, 해당부서가 관장하는 업무 가운데 무슨 기사거리가 없느냐고 찾는 식이다. 그래서 수집되는 뉴스도 자연히 관변적인 것이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뉴스중심 취재체계는 이와 전혀 반대되는 개념이다. 이른바 문제가 있는 곳에 기자가 있는 것이다. 즉, 기자가 출입처의 한계나 범위내에서 기사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문제 위주로 접근한다. 따라서 취재 대상문제와 관련된 곳이면, 기자는 어느 곳이나 찾아가지 않으면 안된다.

뉴스 중심 취재 체계를 요약하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기자들을 투입하여 기사를 수집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뉴스를 부서별로 판단하지 말고, 주제별(즉, 생활뉴스·정치뉴스·환경뉴스·오락뉴스·교육뉴스…… 등)로 범주화하여, 각 뉴스 분야마다 문제를 나누어 기자들을 배치하자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범죄 전담기자, 공기 오염 전담기자, 무역 전담기자 등의 형식이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뉴스중심 취재체계를 당장에 실현하기 어렵다면, 과도기적 형태로 현행 체계를 부분적으로 개선해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직하다. 그러니까, 현재의 구조를 유지하되, 기자들이 뉴스수집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보완하자는 방법이다. 이를테면, 기자 비리의 원천이었다고 할 수 있는 1인 1출입처 개념과 기자단을 없애고, 출입처를 편집국이나 보도국의 각 해당부서가 공동 관리하는(취재하는) 형태로 바꾼다면, 현행 취재체계도 나름대로 기능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부 기자라 하더라도 추적하는 문제가 정당의 움직임과 관련된 것이면, 그 정당에 나가 자유롭게 취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법이 체계적으로 보장될 때, 적어도 지금과 같은 부조리한 상황은 줄어들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다.

#### IV. 맺는말

지금까지 우리 언론의 출입처 중심 취재 체계의 장·단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같은 현행 취재 방식은 몇 가지 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언론 현실로 보아 폐해가 더 크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취재 체계가 뉴스 중심으로 재 개편되거나 재선되지 않으면 무력한 보도 활동은 물론, 언론의 구조적 비리가 척결될 수 없다는 지적들이 곳곳에서 나오고도 있다.

물론 오랫동안 관행으로 굳어진 취재 체계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 새로운 취재 방식을 수용하자면 언론사의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출입처 중심이라고 하는 폐쇄적인 현행 체계에서는 취재인력의 증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지 않아도 되나, 만일 사회적 문제 중심으로 취재체계가 세분화 또는 확대된다면, 인력의 증대가 필수적인 것이다. 그것은 또한 편집국이나 보도국 구조의 개편으로 이어지고, 언론사 운영과 관련한 경제적 부담도 커지게 하는 원인이 된다.

그러나 올바른 정보를 사회에 제공할 수 있는 취재체계의 변화는 현실적으로 시급하다 그것이 곧 양질의 정보에 대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지름길이며, 언론의 무기력함과 부조리를 씻어내는 가능한 대안일 수 있기 때문이다.

- 전남대 영문과, 서강대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기독교중앙방송국 보도국 사회부·정치부 기자역임
- 저술: 「언론의 이념성유지기제로서의 뉴스구성원직과 관행」 외
- 현재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